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의 이해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2021.12



# Contents

- 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 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내용
- 3 추진체계 및 절차
- 4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사항

# 1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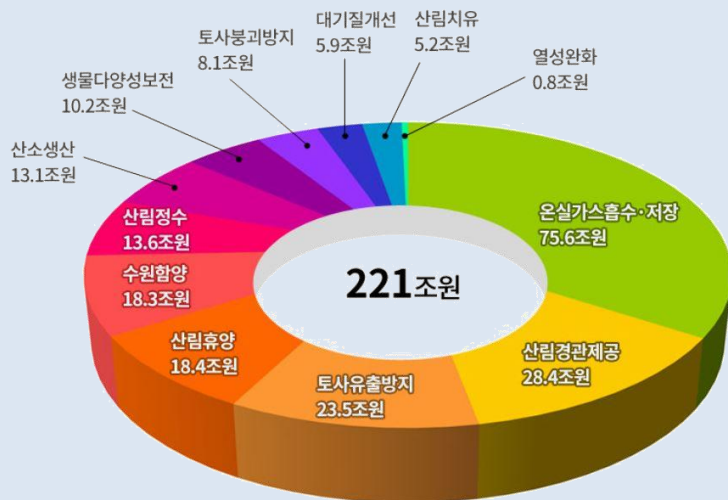


##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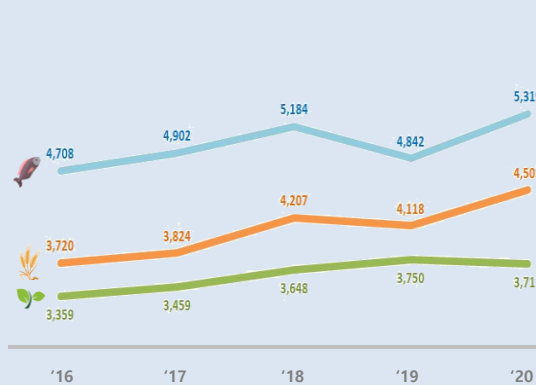
##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 산림은 약 221조원의 공익적 가치 창출
- 국민 1인당 연간 428만원 혜택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동력

- 농가, 어가 대비 낮은 임가소득
- 20년 임가소득 37백만원 (농가의 89%, 어가의 70% 수준)



농업, 수산업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임업분야 도입 시급**

## 산림청 정책추진

산림에서 목재를 포함한 **유형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과 온실가스 흡수, 토사유출 방지, 산림휴양 등 **무형의 산림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옴

### <제4차 산림기본계획>

#### ☑ 4.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 ✓ 비전/목표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 ✓ 성과

- SFM 이행을 위한 기준과 지표설정, 「산림법」에서 「산림기본법」
- ‘심는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가치 증진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촌개발사업 본격추진**
- 백두대간 등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보전 관리체계 구축, 「산지관리
- 산불진화 역량 확충과 해외조림사업 확대
-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신설 및 FGIS 시스템 구축

### <제5차 산림기본계획>

#### ☑ 목표

-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 혜택의 선순환 구조 확립

#### ☑ 7대 전략 \* 제5차 산림기본계획(변경, '13)

- **지속가능한 기능별 산림자원 관리체계 확립**
-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탄소 관리체계 구축
- 임업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산림 생태계 및 산림생물자원의 통합적 보전·이용 체계 구축
- 국토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산지 및 산지재해 관리
-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재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
- 세계녹화 및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 기여



## 토론회 및 연구용역 추진

- 임업직불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5건 추진('05, '08, '16, '20, '21)
-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6)
- 임업인 대토론회 ('17)



심포지엄 개최



임업인 대토론회(한국농어민신문, 2017.4.11)

## 국회 법안 발의('17~'19)

- 정진석 의원이 발의한 「임업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17.9.12)」과  
엄용수 의원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19.2.26)」에서  
임업 부문 직접지불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을 추진하였으나 **무산**
  - 신규 법안은 수산분야 조건불리직불제를 그대로 차용하여 산림분야에 부적합하며,  
개정안은 농업분야 복잡한 이슈로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
- 공익형 직불제를 지향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2019.12.31. 개정)」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임업 부문이 제외**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  
되는 토지”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임업직불제 TF 추진('18~'21)



## 임업인 토론회 및 의견수렴

### ➤ 임업직불제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19. 3) 및 임업인 의견수렴 개최('21)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시행(19.4.1)

-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임야’ 포함되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시행  
→ 직불제 대상 특정 및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 해소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이렇게 등록하세요!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 임대의 경우 토지정보·임대차기간·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정보·서명 등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서류를 준비하면 등록가능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임업직불제 관련 법률안 발의('20, 3건)

정진석 의원(7.31), 서삼석 의원(9.14), 윤재갑의원(11.9)

### 정진석 의원, '임업직접지불제' 법률안 대표발의

최명환 기자

최종 기사일력 2020-09-01 18:35



정진석 <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임업 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과 육림 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는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체 산림의 2%인 157만ha가 국가에 의해 공익용 산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도 못 하면서 매년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담하다며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왔다.

특히 2018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임업은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려워 소득증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64만 원으로 농가소득 407만 원의 8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는 산림청장이 임업 생산성과 경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 지역의 임업인에게 임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임업·산림 직접지불제'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 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률안' 대표발의  
전국민이 보다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 공익적 가치 높일 것

나남길 nnews@naver.com | 등록 2020.09.15 09:36:55

URL 복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4일(월) 열악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임가의 소득액은 3천8백만원으로 어가의 78%(4천8백만원), 농가의 91%(4천1백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개편 및 확대 추진되었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접지불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업에 임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윤재갑 의원, '산림조합법 개정안과 임업직불제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김원태 기자 | 승인 2021.08.17 13:48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오늘(17일) 의정활동을 통해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뉴스

중도일보('20.8.1)

한국농촌경제신문('20.9.15)

대한뉴스('21.8.17)

## 관계기관 업무 협의(2)



산림청-농관원 업무협의(8.31)



산림청-농림부 업무협의(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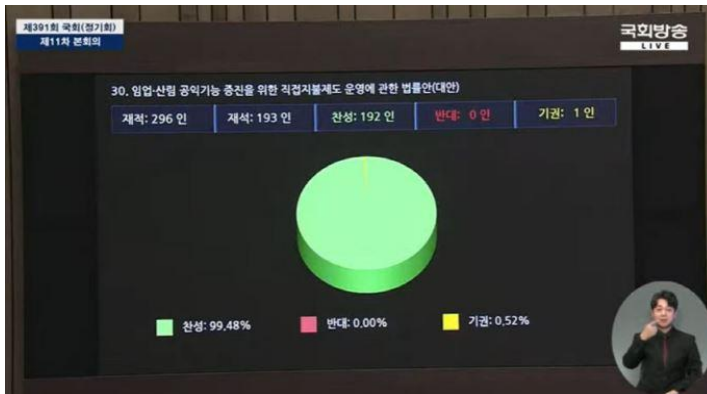
## 국회 법률안 제정(21)



상임위 통과('21.10.5.)



법사위 통과('21.11.9.)



본회의 통과('21.11.11.), 법률 공포('21.11.30)



# 임업·농업·수산업 공익직불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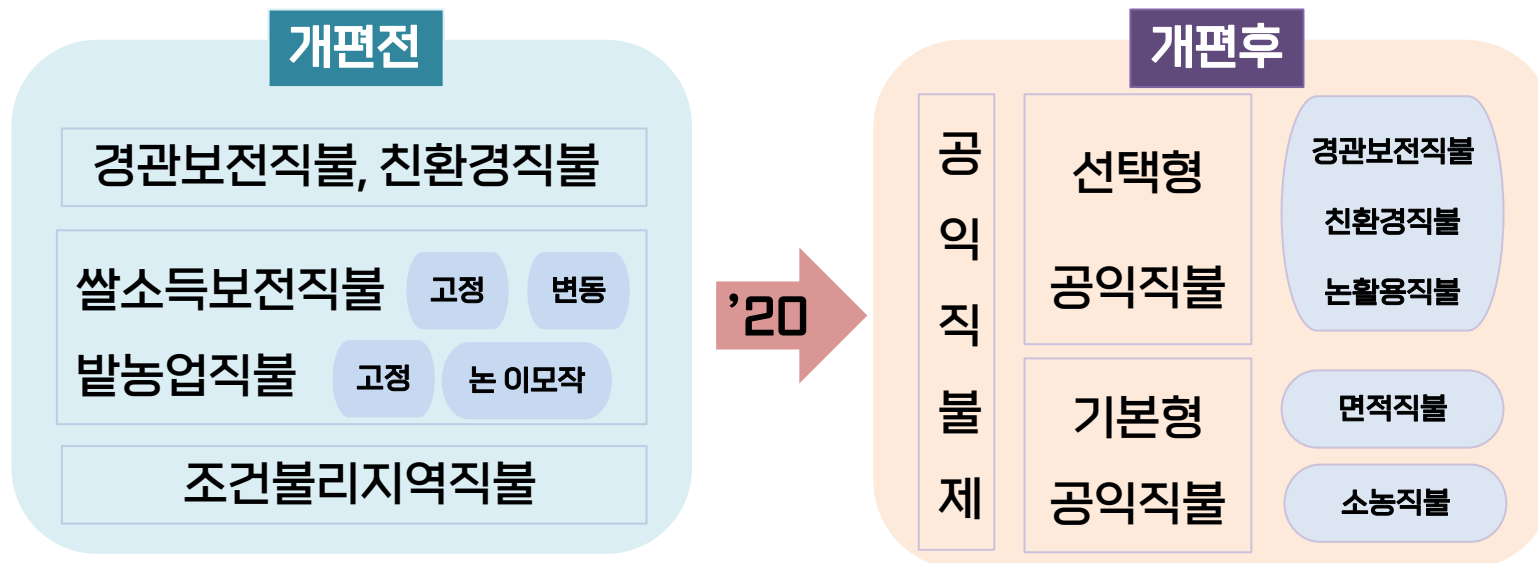
농업			
공익직불제	기본형	농업	소규모농가
			면적
	선택형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	
		경관보전	
		논활용(논이모작)	

수산업	
공익직불제	친환경수산
	수산자원보호
	경양이양
	조건불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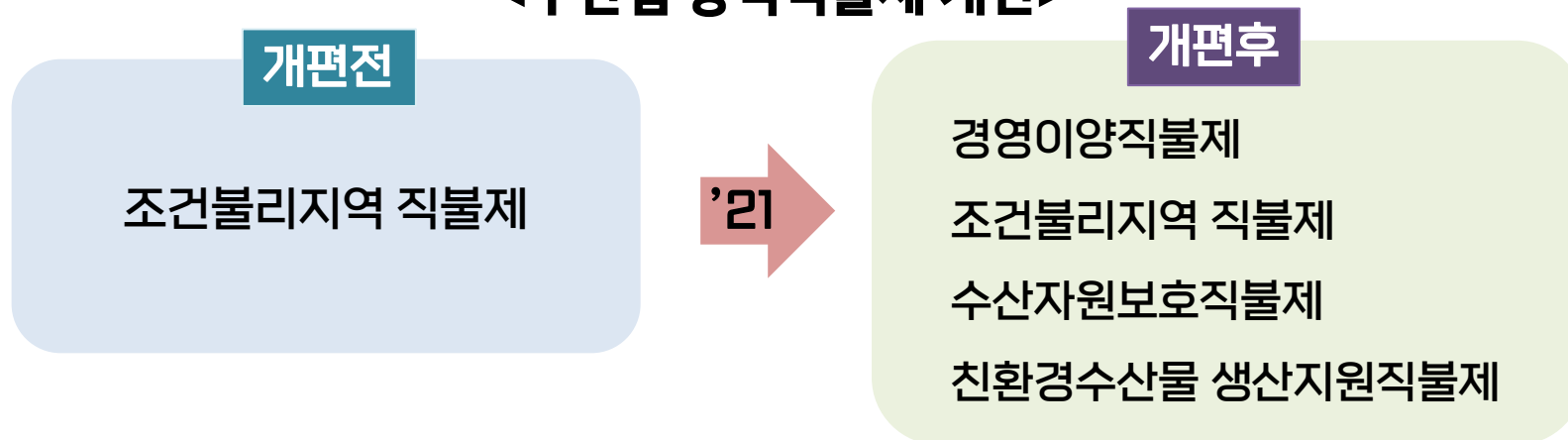
임업(안)		
공익직불제	임산물 생산업	소규모임가
		면적
	육림업	



## <농업 공익직불제 개편>



## <수산업 공익직불제 개편>



# 농업·임업 직불금간 중복 가능 여부

**동일토지** : 한 가지 직접지불금만 수령 가능

**다른토지** : 농업 기본형 직불금과 임산물생산업 면적 직불금은 **합산 면적기준 이하** 수령 가능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 분		농업 분야		임업 분야		
		(농업) 기본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소농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소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농업) 기본 직불금	소농가직불금 수령시		x	x	x	○
	면적직불금 수령시	x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
임산물 생산업	소임가직불금 수령시	x	x		x	x
	면적직불금 수령시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x		○
육림업직불금 수령 시 택1		○	x	x	x	
		x	x	x 소규모 불충족으로 동시 수령 불가	x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x	○ 면적합산 상한적용	



#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어디인가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2022년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임업·산림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직불금은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보조’ (WTO협정) 성격을 가짐  
→ 등록기간을 제한해 지급대상산지의 한정 필요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농업경영체'

- **정의**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
- **목적** 경영활동에 관한 기초정보 조사·등록으로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절차** 신청·접수(지방산림청) → 현지조사 → 임업경영정보 등록부 작성·시스템등록  
→ 확인서·증명서 발급 → 사후관리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산림자원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란 무엇인가요?

▶ **등록기관 : 5개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 \* 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등록신청서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신청인 정보 : 경영체 구성원 기본정보</li><li>■ 임야 및 임업경영 정보 : 재배품목, 면적, 시설 등</li><li>■ 산림경영계획 인가 정보</li><li>■ 보조금, 소득, 자산 정보</li><li>■ 임산물 생산 판매현황</li></ul> <p>* 임야대장, 등기부, 소득증명 등 행정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p>
시스템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임업경영정보 변경 및 유효기간 3년마다 변경신청을 통해 등록정보 현행화</li></ul>
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재배사실 및 경계, 면적 등 확인</li></ul>
등록확인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증명서발급 : 직접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지자체 민원창구</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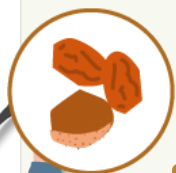
# 2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내용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됩니다.**

※ 직불금 대상 임야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19.4~'22.9까지 등록된 산지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소득 보전 및 공익기능 기여

### 1 소규모임가 직불금

임가 내 구성원(지급대상 포함)의 면적,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

### 2 면적 직불금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중 '소규모임가직불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

## 육림업 직불금



산지에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장기·저수익성 소득 보전 및 공익가치 창출  
-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임업인에게 지급

직불금의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춘 뒤,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

## 의무준수사항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의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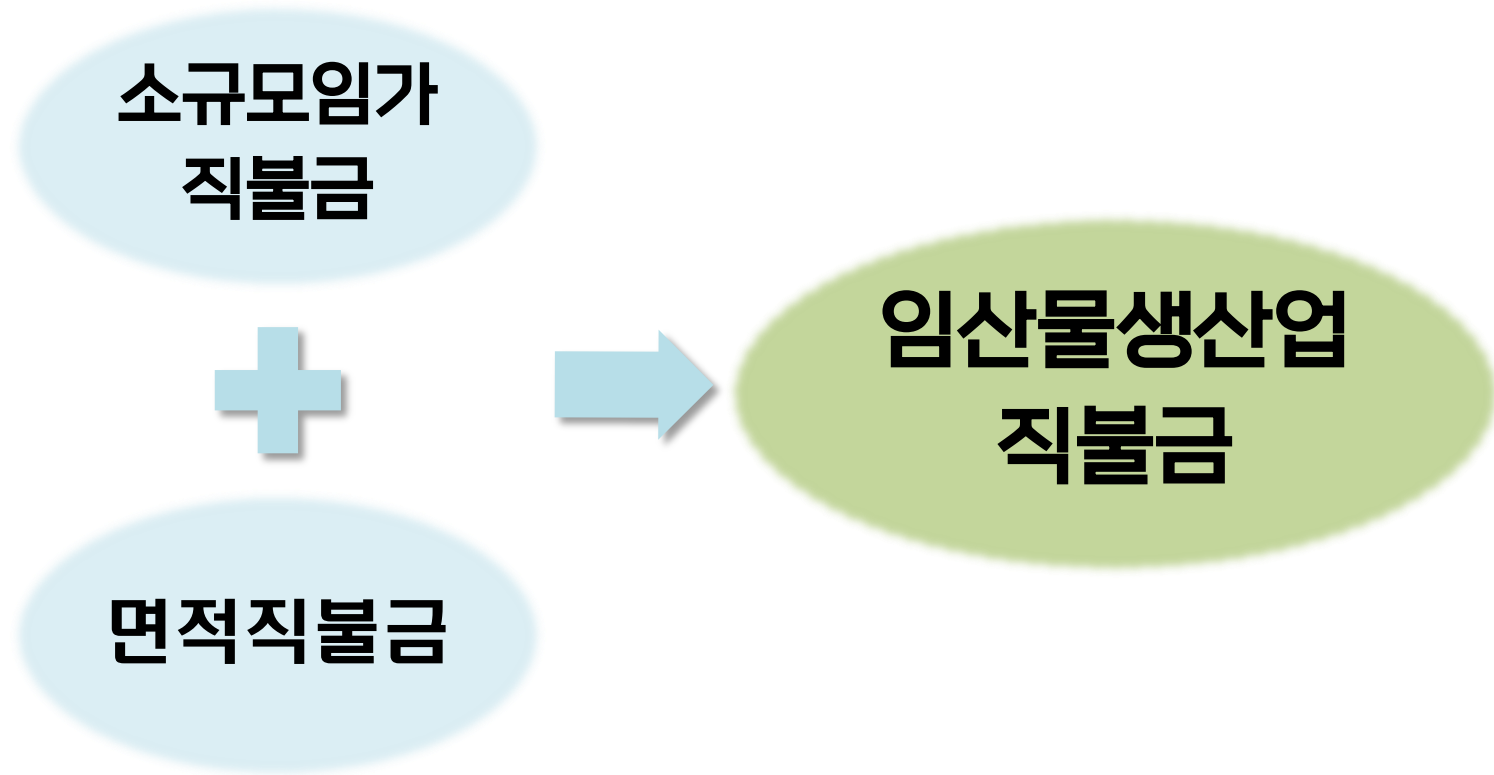


# 2-1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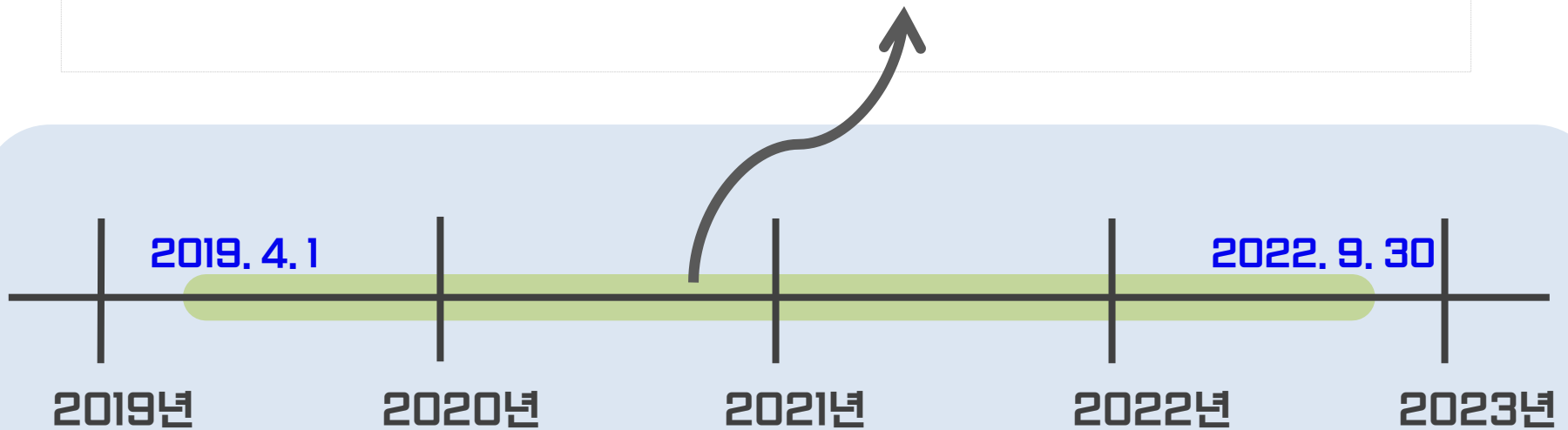
1. 소규모임가 직불금
2. 면적 직불금

임산물생산업은  
**‘소규모임가 직불금’** 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 01 지급대상 산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02 지급대상자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필수 증명사항

직전년도 1년 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 직전년도 1.1~12.31



직전년도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스마트 영림일지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 증빙**  
(법인 4,500만원)

\* 출하 및 직거래 증빙서류



### ▶ 연간 90일 종사 확인방법(스마트 영림일지 예시)

- ✓ 임업활동 또는 산림보호활동 : **1일 인정(GPS 기반)** \* 45일 이상 충족
- ✓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 판매 영수증 및 사진 : **1일 인정**
- ✓ 경영계획 수립 등 지자체, 산림조합 상담이력 : **1일 인정 (QR)**

## ▶ 소규모임가 직불금이란?

소규모 산지를 경영하는 영세임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면적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

### 01 소규모임가의 범위

**01**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업인으로 구성

**02** 0.1ha ~ 0.5ha 산지를 경영하는 소규모 임가 (법인 제외)

**03**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임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달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
- 미혼인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기간 3년 이내인 자

## 02 지급요건

- 1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임가 구성원의 소유산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2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간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 농촌 : 읍,면과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동지역
- 3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이 **2천만원 미만**, 임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 4,500만원 미만**
- 4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 5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 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 에게 지급!

• 임가 구성원이란?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구성원 (임업인, 비임업인 모두 해당)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란? : 임가 구성원 중 직불금 신청자 1인

\* 임가 내에서 임업경영체를 분리하여 등록한 경우, 모든 경영체의 지급가능 대상자 전부가 지급대상자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소규모임가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 없이 **가구당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 04 지급불가 예시

**사례1**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0.3ha이고, 농가 구성원 소유 산지가 2ha → **조건 미충족**

\* 임가구성원 소유 산지의 합이 1.55ha 초과함

**사례2** ▶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인 자녀(비임업인)의 연봉이 5천만원 → **조건 미충족**

\* 가구내 농외소득 합이 4,500만원을 초과함

**사례3** ▶ 직전년도 소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배우자(임업인)가 소임가직불금 신청 → **조건 미충족**

\* 직전년도 소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구성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규모임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면적 직불금** 신청 가능

모두 충족시 소규모임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선택

## ▶ 면적 직불금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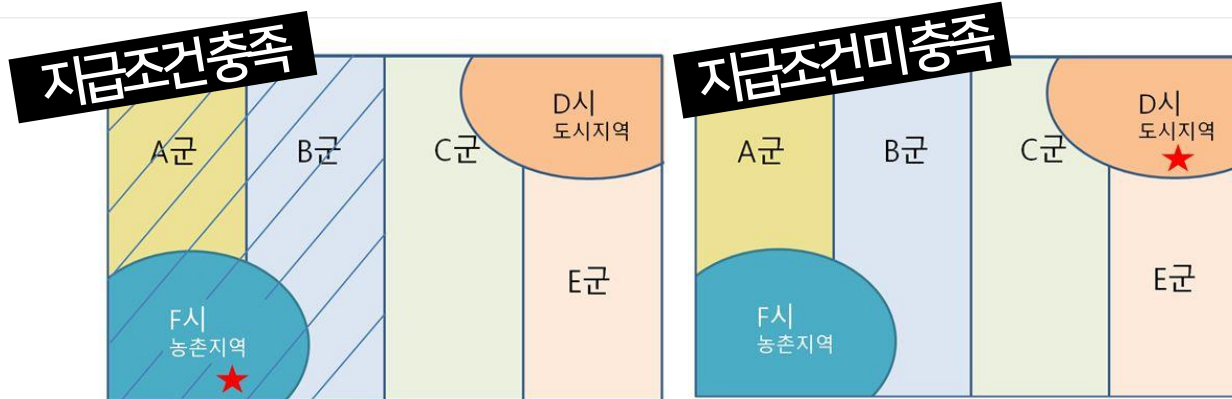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게 면적기준에 따라 직불금 지급

### 01 지급대상

**01**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02** 0.1~30ha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법인 5~50ha)

**03**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  
\* 해당하지 않는 임업인은 '**주업**' 기준 충족해야 함



▶ **주업기준**은 어느 상황에 적용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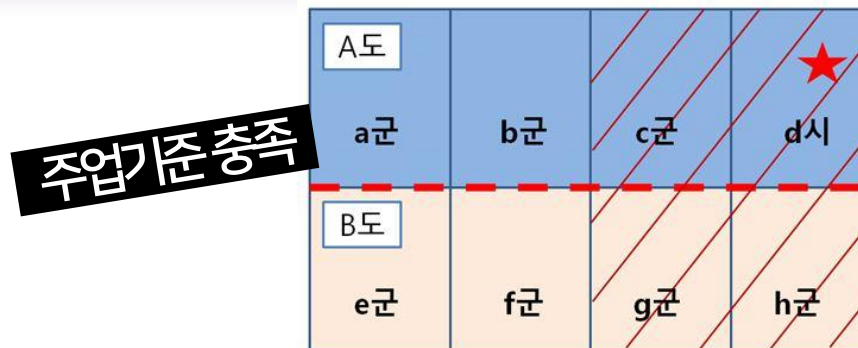
주소지가 농촌이 아니거나, 동일 · 연접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산지에 대해 직불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01**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3ha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법인 10ha)

**02** 연간 임산물 판매액 1,600만원 이상(법인 8천만원)

**03** 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 투입비 800만원 이상(법인 4천만원)

세가지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포함





- ▶ 지급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

## 02 지급단가

구 간	면적	단가
1 구간	0.1~2ha	94만원/ha
2구간	2~6ha	82만원/ha
3구간	6~30ha	70만원/ha

### ▶ 지급예시

- 임산물생산업 1ha(3천평) → 94만원 (94만원x1ha)
- 임산물생산업 5ha(15천평) → 434만원 (94만원x2ha) + (82만원x3ha)
- 임산물생산업 10ha(30천평) → 796만원 (94만원x2ha) + (82만원x4ha) + (70만원x4ha)
- 임산물생산업 30ha(90천평) → 2,196만원 (94만원x2ha) + (82만원x4ha) + (70만원x24ha)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최대 30ha, 법인 최대 50ha**

**\* 임가별 상한면적 있음**

## 01 지급제외산지

휴경

국유림,  
공유림

일시적인  
채취행위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타 직불금  
신청 산지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작업로,임산물운반로예외

등록제한기간중에  
있는자가소유한산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

택지개발지구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등록신청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산지분에 대해  
1년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산지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02

지급제외 대상자

01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에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

02

농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직전년도)과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지급면적의  
**합이 30ha 초과**

※ 상한까지만 지급

03

자기의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

※ 해당 산지에 한해 제외

## 03 지급제외 대상자

-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획득한 자  
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인정

### • 소임가직불금 예외 인정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 소유자가 일부 양도· 임대한 산지 이외의 산지분을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 본인을 제외한 양수인 1인에게 지급 가능

### • 면적직불금 예외 인정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 소유자가 일부 양도· 임대한 산지 이외의 산지분을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 \* 본인을 제외한 양수인 1인에게 지급 가능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2년 이상** 계속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경우
  - 유예기간 후 지급 재개



2-2

**육림업 직접지불금**

육림업은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을 말함

산림경영계획



육림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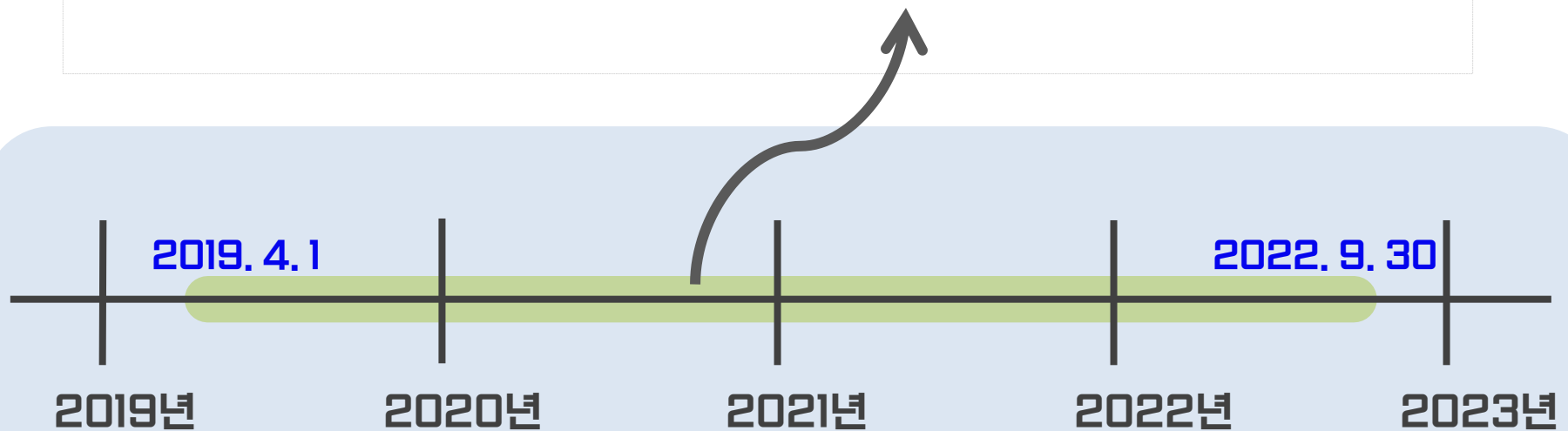


육림업



## 01 지급대상 산지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2022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육림업 직불금**이란?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장기·저수익성 소득 보전 및 공익가치 창출

## 02 지급대상

필수 증빙 : 직전년도 1년 동안 지급대상 산지에서 **육림업에 90일 이상 종사** \* 스마트영림일지

**01** 신청년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3~30ha 산지(법인 10~50ha)

**02** 대상 산지를 소유(또는 입목등기)하고 육림업 종사하는 임업인(농업법인)

**03**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농업법인은 해당없음)

**04**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  
\* 해당하지 않는 임업인은 '**주업**' 기준 충족해야 함



## ▶ 주업기준은 어느 상황에 적용될까?

주소지가 농촌이 아니거나,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산지를 직불금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 01 거주지와 동일 시도 또는 연접 시군구에서 30ha 이상 경영(법인 300ha)



- ▶ 지급대상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

## 03 지급단가

구 간	면적	단가
1구간	3~10ha	62만원/ha
2구간	10~20ha	47만원/ha
3구간	20~30ha	32만원/ha

### ▶ 지급예시

- 육림업 10ha(3만평) → 620만원 (62만원x10ha)
- 육림업 20ha(6만평) → 1,090만원 (62만원x10ha) + (47만원x10ha)
- 육림업 30ha(9만평) → 1,410만원 (62만원x10ha) + (47만원x10ha) + (32만원x10ha)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최대 30ha, 법인 최대 50ha**  
**\* 임가별 상한면적 있음**

## 04 지급제외대상

-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

### • 육림업직불금 지급제외 예외사항

- **상속**에 의한 경우
-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 소유자가 **일부 양도한 지급대상 산지 이외의 본인 소유산지분**을 모두 지급대상산지에서 **제외**하기로 산림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 \* 본인을 제외한 양수인 **1인**에게 지급 가능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산지에서 2년 이상 계속 육림업에 종사**한 경우

## 05 지급제외산지

휴경

국유림,  
공유림

타 직불금  
신청 산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고시

택지개발지구

다른 법률에 따른  
육림업 제한 지역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운반로 예외

등록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3

**의무준수사항**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구 분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li> <li>- 산불·산사태 및 병해충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li> <li>- 이웃한 토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설치·관리</li> </ul> </li> <li>▪ <b>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등의 역할</li> <li>-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li> <li>-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등의 준수사항</li> <li>-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li> </ul> </li> <li>▪ <b>그 밖의 준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료의 보관 준수,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하천의 사용·관리 준수, 지하수 개발·이용 준수, 퇴비 액비에 관한 준수, 생태계교란생물 수입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신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농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의 변경등록,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영림기록 작성보관,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 협회·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li> </ul> </li> </ul>	

구 분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개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 :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임산물의 생산단계, 유통·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li> <li>- 화학비료 :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li> </ul> </li> <li>▪ <b>임산물 생산·유통·판매시 유해물질 잔류허용량 안전기준 적합</b></li> <li>▪ <b>출하제한및임산물폐기등처리조치준수</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 관리</li> <li>-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시행</li> </ul> </li> <li>▪ <b>입목의 유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그루수 유지</li> <li>- 조림 후 활착률 일정 수준 이상(조림 후 일정기간)</li> </ul> </li> </ul>

※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 임업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여러 건 동시 위반 시**  
각 감액을 합산  
10% + 10% + ...

**반복 위반 시**  
**감액비율 2배 적용**  
1차 위반 시 10%,  
2차 위반 시 20%,  
:  
:

# 3

## 추진체계 및 절차

## 산림청

- 지침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총괄

## 시·군·구

- 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제한, 등록제한
- 소유거래 등 등록사항 조사
- 과태료·가산금 부과 및 징수

## 지방산림청(5)

- 의무준수 이행점검
- 경영체 등록·변경
- 과태료·가산금 부과 및 징수

## 한국임업진흥원

- 공익증진 교육 설계
- 직불금 상담지원센터
- 직불제 이행점검시스템 지원
- 공익증진 교육 실시
- 농약·토양 검정

## 산림조합

- 스마트영림일지 시스템 관리
- 경영컨설팅

## 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 경작사실, 농촌거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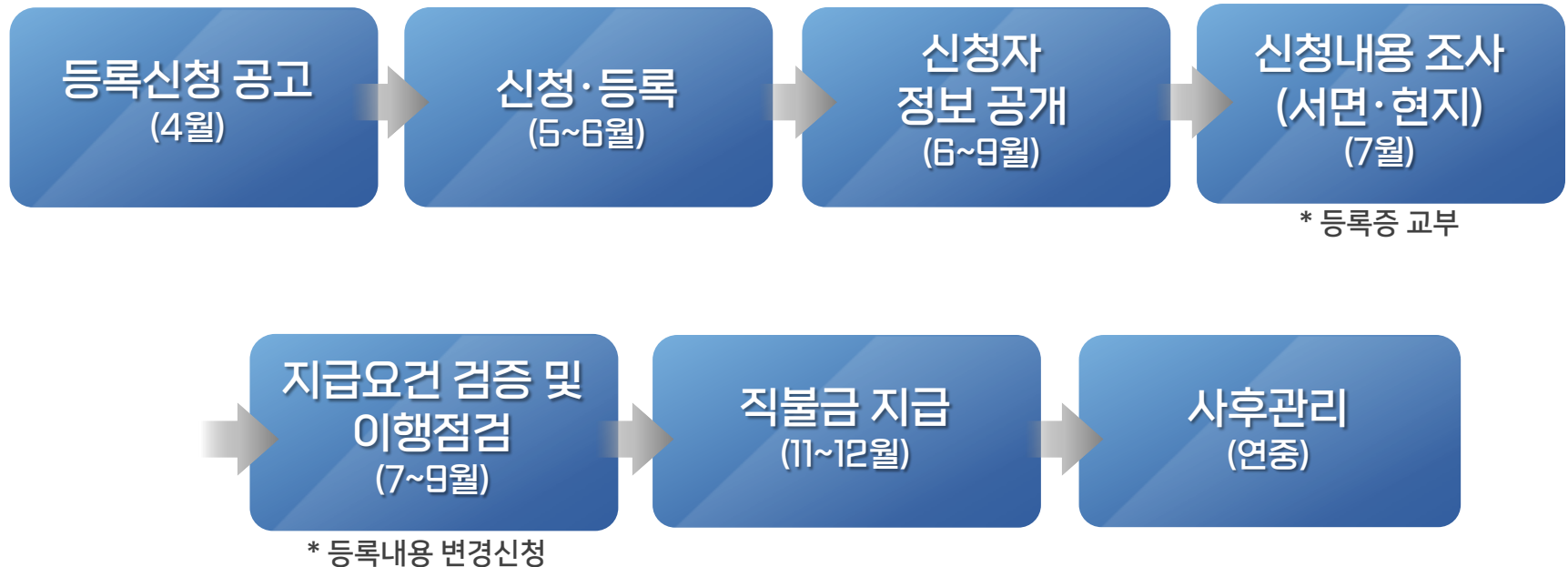
## 국유림관리소(27)

## 명예감시원

- 이·통장
-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직원



▶ 접수 및 지급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지방산림청(관리소)



# 4

## 임업직접지불금 주요 사항

## 1 재촌산주 원칙 실현

-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으로 소유에 제한이 있으나, 산지는 임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산지를 소유할 수 있어 부재산주의 직불금 부담수령 가능
- 원거리 거주자가 자격요건만 갖추어 직불금 수령시 제도 취지에 어긋남

➔ 직불금을 통한 농산촌 유인, 국토 균형발전 정책목표 실현 어려움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 거주자**로 지급대상 한정
- 직불금 신청년도 직전연도 **90일 이상 임업 종사** 조건 마련
- 부재산주는 **강화된 주업 기준 충족**

## 2 산지포개기 방지

- 직불금 산지를 분할하여 일부를 양수(매매, 임차)할 경우 부정수급 유발 가능



- 직불금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분할 양도/양수 어느 한 쪽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포개기 편법 차단
  - 단, 제외된 산지를 일정 기간(2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 (소임가직불금은 제외)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분할 인정

### 3 일시적인 채취행위 제외

- 재배· 관리 행위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동일하게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  
(주요 채취품목 : 송이, 석이, 능이, 싸리, 산나물류 자연 채취 등)



- 파종·식재·종균접종 없이 생산하는 산나물류·약초류·버섯류 제외
- 수목부산물류(수목의 잎, 껍질, 뿌리 등) 제외
- 다만, 집약적인 재배관리가 수반되는 일부 품목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
  - 송이(송이산가꾸기 등 집약적인 재배관리하는 경우 한정), 수액, 죽순





임업인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사유림의 경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